제12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5년 12월 5일(금)
16:00~19:0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종합토론】
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윤강현 (前 주이란 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김귀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국방안보연구소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포럼기획 : 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작성책임 : 서진아 학예연구사(02-709-3174)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12회 KWO 나지포럼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제12회 KWO 나지포럼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6:00~19:0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5:30~16:0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식	16:00~16:10	• **개회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종합토론	16:10~17:20	【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윤강현 (前 주이란 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김귀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국방안보연구소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기념촬영	17:20~17:30	**기념촬영**
리 셉 션	17:30~19:00	**만 찬**
폐 회	19:00	**폐회 선언**

〈목 차〉

【종합토론】

천명국(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9

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13

이상규(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17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21

박노벽(前 주러시아 대사,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 ·····27

최윤희(前 합참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33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35

윤강현(前 주이란 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37

마영삼(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39

김귀근(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43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47

이철재(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국방안보연구소장) ·····49

남성욱(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53

김용휘(Yung Gallery 회장) ·····57

다자토론 ·····61

종합토론

【토론자】

천명국(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상규(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노벽(前 주러시아 대사,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
최윤희(前 합참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윤강현(前 주이란 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마영삼(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김귀근(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이철재(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국방안보연구소장)
남성욱(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용휘(Yung Gallery 회장)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한미 Joint Factsheet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1. (Joint Factsheet) 지난 11. 14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안보 분야 '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합의함에 따라 오랜 기간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원잠 건조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었음
   - 1990년대 초 비닉사업으로 원잠 건조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비밀리에 '362 사업' 추진, 문재인 정부 시절 미측에 원잠 구매 타진 및 한국의 원잠 건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성과가 없었음
   - 이번 성과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국익 추구 정책, 개인적 특성 등을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결과로 보임
   - 이에 대해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전력 강화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

2. **(후속 협상)** Joint Factsheet에서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잠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후속 합의 필요
   - 원잠 건조와 관련 Factsheet는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표현을 담고 있어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
   - 조현 외교부장관은 11. 28일 국회외통위 발언에서 원잠 건조 추진과 관련, 국가안전보장

회의(NSC)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잠재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 (* 원잠 도입 관련 △건조 장소와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 등 기술적인 논란이 있고,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협정을 개정할지 현재 협정에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할지 검토 중임을 언급 ** 한편 위성락 안보실장은 11. 14일 Factsheet 관련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

- 원잠용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새로운 한미 협정 체결이나 미측의 관련 입법 조치 필요성, 한국의 농축·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내지 보완 조치 필요성 등은 한미 간 후속 협상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암시

3. **(원잠 건조·운용 관련 예상 난제들)** 향후 원잠 건조·운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난제들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내적)** △원잠의 역할과 건조 규모, △막대한 건조비·운영비 확보, △원잠 기지 선정·확보 및 건설, △원잠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리, △잠수함 승조원 확보(병력자원 감소, 승무원 지원 기피) 등
   - **(대외적)** △원잠용 핵연료 공급, △원잠 건조 장소·방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보완 협상, △원잠용 핵물질 안전조치 관련 IAEA와 협상, △원잠 운용·정비 및 핵연료 교체, △한미동맹 역할 확대, △미국의 확장억제 변화, △주변국과의 긴장 관리(군사·외교·경제) 등
   - 원잠 건조 앞에 놓인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원잠 확보를 위한 전례 없는 우호적 환경과 원잠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함

4. **(원잠 확보의 우호적 환경)** △美 트럼프 정부의 원잠 건조 승인, △원잠 건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 △원잠 건조 관련 우리의 기술 역량 등은 한국이 원잠 기술을 개발하고 원잠을 건조·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절호의 기회

5. **(원잠의 전략적 가치)** 원잠은 기동성(속도), 은밀성(수중작전기간), 공격력(무장탑재량), 생존성(방어체계) 등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하며, 운용 국가에 폭넓은 전략적·작전적 융통성 제공 가능
   - 5개 공식 핵보유국과 1개 비공식 핵보유국이 원잠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비핵보유국(브라질, 호주)이 원잠 건조를 추진 중인 이유임
   - 원잠은 그 자체로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보유국의 핵 억제력 발휘에 핵심적 역할(2nd Strike)을 제공하며,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억제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함
   - 한국의 원잠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체계 운용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 가능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대국 해군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필요시 원해에서 국가 해상교통로(LoC)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가능

6. **(원잠의 역할과 건조 규모)** 원잠의 건조 규모는 향후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전략목표 달성에 있어서 원잠의 역할, 가용 국가자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한국 원잠의 역할: △북핵 위협 억제 임무(Kill-Chain, KMPR),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주변국 군사활동 감시·견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인·태전략 지원, △유사시 해상교통로 보호 등 고려 가능

7. **(원잠용 원자로와 핵연료)** 자체 설계한 원잠용 원자로를 채택함으로써 농축 및 핵연료 설계·제조 능력 확보, 원잠 운용의 자율성 확보 필요
   - 우리 정부는 혁신형 소형원자로(i-SMR) 설계를 기반으로 원잠용 원자로를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며, i-SMR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8.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원잠 건조 승인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잠의 건조·배치·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제가 남아있고, 또 원잠의 효용성과 가성비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바, 원잠 건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결집과 비범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됨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1. 2025년 국제정세 평가 및 2026년 전망

가. 2025년 정세 평가 : 신냉전과 자국 우선주의 심화

ㅇ 미중전략 경쟁이 전방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 러우전쟁 장기화 △ 중동사태 악화·미국 개입(이란 핵시설 공격) 등 지구상에서 複數의 전쟁이 진행

ㅇ 미국 주도 세계질서 약화 및 복합적 다극 체제로 재편이 가속화 → 이는 △ BRICS 영향력 △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강화 등이 작용한 결과

ㅇ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 경제·통상에서는 WTO체제의 현격한 약화 △ 안보에서는 안보리 기능 및 NPT체제 무력화

ㅇ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귀환하고, '거래적 동맹관계'가 강화되어 서방 진영의 응집력 약화 및 국가 간 각자도생이 일상화

나. 2026년 전망 : 국제질서 변동 요인은 상존하나, 신냉전 흐름은 지속

ㅇ 국제정세가 가치 기반 결속이 약화되고, 이익 기반 질서체제로 재편되면서도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 권위주의 진영 대립 구도는 불변

- 여전히 △ 러우전쟁 진행 △ 중동사태 재연 소지 △ 대만해협 위기 우려 △ 북핵 위협 증가·한반도 불안정 △ 對미 중·러·북 협력 강화로 불안한 정세 지속

☞ 진영에 편승,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안보 우선 국가전략이 국제정치를 지배

ㅇ 그러나 現 신냉전 국제질서는 미소 냉전체제에 비해 △ 진영 내결속력 약화 △ 진영 넘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으로 변화 (대립 → 협력 위주) 가능성도 상존

-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고용위축 등 부작용도 미국의 자유무역 복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이에 따라 미중 관세전쟁의 '일단 유예(2025.11)'를 계기로 미중 공히 「리스크 줄이기 전략」을 추진 할 경우 통상갈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

※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 자국 경제 부양(물가인하 등)을 위한 관세 인하

△ 노벨 평화상을 의식한 미북 정상회담/러우전쟁 종식 등을 끌어낼 때 2026년은 2025년보다는 미중대립이 다소 완화된 국제정세가 전개될 소지

2. 2025년 한반도 정세 평가 및 2026년 전망

가. 2025년 정세 평가 :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

ㅇ 2025년에는 신냉전체제 전개 → 글로벌 차원의 하위영역인 한반도의 자율성 제약 → 남북 간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동력도 약화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한미일 ↔ 북중러 대립' 구도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 간 협력 노력이 없이는 남북한 간 협력도 한계

ㅇ 체제 위기감에서 비롯된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관계 단절 상황 지속

-「핵미사일 개발 → 대북 제재→ 경제난 심화 → 주민 불만 → 정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 강국 건설' 가속 → 국가 경제의 왜곡」 악순환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통일 희구) 및 한류 확산

☞ 남북 교류·협력 시 주민들의 통일 열망 자극을 우려, 체제수호 차원에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화해협력→'교전 중인 적대적 2개국 관계') 선언

나. 2026년 전망 : 북한의 대남 위협 강화로 한반도 긴장 고조

○ 북한은 2026년을 ① 핵보유국 공인 元年化 ② 남북관계의 '적대적 2국가' 법제화 ③ 對러/중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對南 측면에서 △ 남북대화 제안 무시 △ 국경선 확정(MDL 장벽설치 등) △대남 해킹(경제난 타개를 위한 가상화폐 절취 등) △ 국지도발과 신형 탄도미사일·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위협 수위를 고조

  ☞ 남북대화에 주력하는 우리정부 입장을 역이용,

  △ 우리 헌법 영토조항 (3조) 폐지

  △ 한미연합훈련 중단

  △ 핵추진잠수함 계획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대남압박 고조

- 對美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핵보유국 인정에 기대를 걸면서, 美 본토 위협(재진입 성공) ICBM 시험발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북대화 가능성을 지속 탐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

  ☞ 미국에 표면적으로는 對美 강경 입장을 지속 견지하면서도 김정은에 우호적인 트럼프 임기 내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 핵보유국 공인을 끌어낸다는 조급함도 포지

○ 9차 당 대회·당 창건 80주년 계기를 통해

△ 헌법에 '적대적 2국가' 명시

△'5대 전략무기 완성' 선언

△ 군사분계선·NLL 무력화를 위협하면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

△ 대남 사이버 교란을 통해 한국 사회 혼란 조장에 주력할 전망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한미 확장억제 협력 및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성과와 과제—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1. 한미 확장억제 협력 성과와 향후 과제

【성과】

○ 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제도화

- 2023년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양국이 핵 및 전략적 억제 정책을 공동으로 기획·조율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로 운용
- NCG를 통해 핵·재래식 연계운용, 정보공유, 위기대응 절차 등에서 공동계획 체계가 마련되었음.
- 이는 과거 미국의 일방적 제공 형태였던 확장억제를 양국의 공동 억제체계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

○ CNI(핵·재래식 통합억제) 개념 발전

- 한미는 CNI(Combined Nuclear and Conventional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켜, 재래식 전력과 핵 억제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
- 한미 CNI TTX(Table-Top Exercise)는 그 첫 실행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

○ 한국의 기여 확대

- 한국은 재래식 전략사령부 창설,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추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등을 통해 확장억제 체계 내 능동적 역할을 강화

-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억제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평가

【 과제 】

○ 북미대화 재개 국면에서의 억제력 약화 우려

-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이 강조될 경우, 전략자산 전개 축소, 확장억제 협력의 가시성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확장억제 신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작권 전환(FOC)과 CNI 협력의 쟁점화 가능성

- 전작권 전환이 본격 논의되는 과정에서, 핵·재래식 통합억제(CNI)의 지휘·통제 구조, 한국군의 역할 및 책임 범위, 작전계획의 조정 문제 등이 정치적·군사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 제도적 협력의 지속성 강화 필요

-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추진을 위해 NCG의 지속적 운용과 공동기획·공동실행 절차의 체계화, 관련 전략문서의 일관성 확보 필요
- 아울러 한측 의사결정체계 및 지침문서 작성 검토

2.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

【 성과 】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확보

-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원거리 작전 지속성, 고속 전개, 탐지 회피성, 생존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보복·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 연합작전 및 다영역 대응 능력 강화

- 연합작전 시 지속 운용성·전개 속도·작전범위가 상승, ISR(정보·감시·정찰), 대잠전(ASW), 장거리 정밀타격 등에서 한국의 기여 능력이 확대

○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 △해양안보, △해상교통로(SLOC) 보호, △규범 기반 해양질서 유지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며, 능동적 해양안보 주도국가로 위상 강화

○ 원자력·조선·군사기술 융합 발전

- 원자로 설계, 내압선체, 내구성 소재, 원전 안전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이 결합돼 국내 산업 발전 효과 기대
- 원자로 소형화 기술, 열역학·중성자 해석기술, 방사선 안전·차폐 기술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과제 】

○ IAEA 사찰 비적용(arrangement) 절차 협상 및 비확산 체제(NPT) 내에서 제도적 추진 난제
- INFCIRC/153 제14조 적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정보 제공, ▲비전용 (Transfer) 검증, ▲군사기밀 보호 조치 등이 핵심 난제로 부상할 가능성

○ 국내 제도·법적 과제 / 원자력 규제체계의 군사활동 적용 문제
- 현행 규제는 민수용(산업·연구용) 원전만을 전제로 되어 있어, ▲군사용 원자로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 ▲감독 권한 설정, ▲비밀정보 보호 조치 마련 등이 제도적 과제로 부상

○ 국내 여론 관리 및 안전조치 문제
- 핵추진잠수함 배치·운영과 관련한 ▲기지 확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안전성 보장 등이 사회적 수용성 확보 과정에서 핵심 쟁점화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여부 쟁점화
-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둘러싸고 공동선언 제2조·제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논쟁, ▲정치적 쟁점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개정 문제
- 미국은 협정 개정 과정에서 ▲핵물질 확산관리 강화, ▲핵연료 이동·전용 위험 통제, ▲기술·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우려 요인으로 제기할 가능성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2025년 국제정세 총평: '질서 붕괴'와 '지정학적 재편'의 가속화

2025년의 국제정세는 '탈냉전 질서의 종말'과 '불확실성의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동맹 및 다자주의 체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지정학적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경제 무기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2025년에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심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 AI 등)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선택적 디커플링'을 강도 높게 추진했으며,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교역 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EU와 한국 등 주요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무기화되는 추세는 2026년에도 국제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동맹 체제의 재조정 압력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강화는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무역 장벽 강화를 통한 공세적 움직임으로 나타나 대서양 동맹의 내구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유럽 내부적으로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EU의 공동 대응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연대에도 불안정성을 더했다.

다. 지역 분쟁의 장기화 및 핵 위협 고조

중동에서는 가자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이란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되는 등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북러 간 신(新)동맹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와 대남 군사 도발에 따른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냉전 시대의 군사적 대치 구도를 복구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2. 2025년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 평가: '강압적 평화' 담론의 충돌

2025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전장 상황이 아닌 서방 주요 행위자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실패하며 종전 노력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가. 종전 협의의 '극적' 등장과 그 한계

2025년 하반기, 미국 측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의안(일명 '28개 항 평화 구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이목을 끌었다. 이 구상은 러시아가 점령지 일부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제한 및 나토(NATO) 가입에 대한 모호성을 포함하는 등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담고 있어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반발과 논란을 낳았다.

이 평화 구상은 종전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어진 우크라이나-서방국 간 제네바 협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점령지 인정 여부)와 미래 안보 보장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나. 전장 상황의 정체와 협상 동력 상실

2025년 전장은 대규모 공세보다는 러시아군이 약화된 우크라이나 군을 조금씩 밀어 붙이며 점령지를 확장하는 추세 속에서 소모전 상태가 장기화되었다. 러시아는 포크로프스크 등 동부 지역에서 꾸준한 압박을 가했지만, 결정적인 압도적 승세를 이끌어 가지는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축소 가능성 속에서 대규모 반격 작전을 수행에서 한계를 보였다. 전선의 정체는 양측 모두에게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힘의 우위'를 통한 최종 승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협상 동력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주요 행위자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전쟁의 빠른 종식'을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그 방식이 일방적이고 러시아에 유리하여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충돌했다.
- 유럽연합 (EU): 대러 제재 유지와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도부 교체 및 내부 정치 불안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 러시아: 전장의 우위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 점령지 영구 인정을 관철시키려 했으며, 미국의 평화 구상을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

☞2025년의 종전 노력은 '정치적 노이즈'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평화 조약이나 영구적인 정전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는 양측의 목표(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종속화,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및 주권 수호)가 여전히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및 우크라이나 종전 시나리오 분석

가. 2026년 국제정세의 핵심 변수

2026년 국제정세를 지배할 핵심 변수는 '미국 우선주의의 강도'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이다.

- 미국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관세, 나토 등)가 확정됨에 따라, 동맹국들은 이에 적응하거나 독자적인 방어 및 경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약화와 블록화 심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 지속적 고금리 및 경기 둔화 우려: 고관세와 고금리가 결합된 환경은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고, 각국의 내수 회복을 지연시켜 신흥국 및 분쟁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나. 2026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시나리오

○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이다.

- 우크라이나의 양보: 미국의 강력한 압력 및 경제적 붕괴 우려 심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 또는 일부 영토 상실을 감수하고 강력한 안전 보장을 획득하는 시나리오. ==〉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평화 조약 형태로 종전될 가능성.
- 장기적 교착에 따른 정전: 군사적 소모전 지속 및 서방 지원 부분적 감소. 양측 모두 군사 승리 불가 인식 하에 '사실상 휴전선'을 인정하며 정전(분쟁 동결) 상태로 돌입.==〉 러시아는 점령지 유지, 우크라이나는 주권 포기 거부로 '미완의 평화'가 도래하며 재정적 충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전쟁 지속 및 확정: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 거부. 러시아의 추가 공세 성공 또는 서방 지원 급격한 중단 등.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고 국지적 확전이 이어지는 상황.==〉 전쟁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며, 2026년 이후까지도 종전이 불투명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문가들과 IMF의 전망을 종합할 때, 현재 협상의 지지부진한 소모전의 상황과 협상 과정의 교착의 반복으로 2026년 중반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완전한 평화조약의 형태 보다는 '정전(Ceasefire)'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 전문가적 판단: 2026년 종전은 희박함

2026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한 '평화 조약' 형태로 종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IMF가 제시한 2026년 중반까지의 전쟁 지속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장 무게가 실리며, 이는 '군사적 교착 상태에 기반한 불안정한 정전'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핵심은 여전히 영토와 주권에 대한 타협점 부재이다.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평화 조약에 서명하기 어려우며, 러시아 역시 군사적 성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26년은 전장의 열기는 다소 식을 수 있으나, 외교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동결된 채로 이어지는 '동결 분쟁(Frozen Conflict)'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방의 관심 분산과 경제적 압박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정전 논의를 수용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될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항복의 뜻을 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상 동결의 휴전 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 정책적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관계의 많은 부분을 동결 시켰다. 많은 경제 행위자들이 이 전쟁의 종결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발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휴전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도 3년은 걸리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통례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완전한 조건의 완성을 기다리기 보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창조적인 개척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2025년 주요 국제 정세와 2026년도 전망 및 대비—

박노벽(前 주러시아 대사,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

1. 국제 안보 및 경제 정세의 주요 영향 요소

1) 강대국 주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문제로 인한 일중갈등, 중동 분쟁 재현 가능성 등 국제 갈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누적,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불안정 지속

나.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러시아는 국내 통제강화와 반서방 유라시아안보체제 구축 도모

- 북한은 러시아 파병 등 러북관계밀착을 통해 각종 지원 및 협력 확대로 비핵화 고립 및 압박에서 탈피,군의 충성도 재확인, 대중 경제의존 완화, 북미대화와 남북 교류 거부 등으로 진영 대결 구도를 고착화 도모

다. 중국은 9월 승전 80주년 열병식계기, 북중러 정상의 반미 대항회동을 과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외교 군사적 연대행동은 자제

라. 독일, 프랑스, 폴란드, 발틱국가 등은 러시아의 드론,사이버 공격 등 Hybrid warfare 증가와 러 잠재적 위협에 대비 자체 군사재무장 추진

2)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와 25년 중간선거대비

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전 세계 125개국에 10%의 보편관세와 무역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 수위로 평가

나.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해소라는 트럼프의 경제 내셔널리즘이 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 충격을 주어 각국의 경제 전략 재조정 초래.

3) 미-중 간의 패권 경쟁심화와 다자제도의 복원력 유지

가. 무역관세 대립과 기술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만재편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시주석간 10월 정상회담시 무역분쟁을 1년간 봉합, 국내경제 영향 최소화도모

나. APEC, G-20 등 계기 다자적 합의 도출을 통한 상호 협력과 분쟁 최소화

4) 경제 안보의 부상과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가. 전통적인 안보 문제 외에도 기후 변화, 감염병, 공급망 안정 등 '신흥 안보' 및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분야의 이슈들이 대두되어 각국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촉발.

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보호무역주의, 진영 대결, 지역 분쟁의 삼중 압력으로 후퇴, 3%대 이하의 저성장율을 유지하는 '저성장 고착화' 시대에 진입

2. 2026년 국제정세 및 한반도 영향관련 예상요인

1) 지정학적 분쟁의 완화 가능성:

가.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2025년 11월 평화안을 우크라이나측에 제시, 협의 후 12월초 미특사를 러에 파견 푸틴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종전 추진

- 트럼프대통령은 중동에 이어, 평화안 중재와 전쟁종식으로 대러 관계개선을 통한 세계

전략 판도 개편 시도

- 유럽 나토국가들은 러시아와 군사정치적 대립과 유럽안보질서의 구축이 어려워 군사적 대비 하에 러시아측과 긴장 지속될 가능성
- 푸틴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종전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목표 달성을 통한 정당성확보와 국제적 위상 회복, 대중의존도 탈피 등 이익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러군대 파병및 혈맹 수준 중 군사협력이 종전 시 상대적 가치 저하에 대비

나.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상호 협력을 지향하는 전환 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미중간 역학 관계 변화와 대만 문제, 한반도 안정에도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

- 다만, 미중정상회담에 따른 전략적 협력 시에도 미국의 대중 상호 경제의존 축소, 중국의 핵심광물자원 무기화에 따른 미중간 경쟁 구도와 글로벌 공급망의 분산은 지속 가능

2) 글로벌 저성장 기조 및 인공지능, 기술경쟁, 기후변화심화 등 리스크 지속

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 내외의 완만한 둔화가 전망되며, 선진국들은 1~2%대의 저성장에 유지하며 물가 상승 위험은 상존 각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무차별관세부과 권한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합법성 결여 판결 시 혼선 및 불확실성 대두

나. AI 기술개발 사이클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가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제기.

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제적 협력이 저하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 어렵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 다대

3. 한국의 대응 방안

1) 미국의 중러 전략변화추이를 활용 한반도 주변국 관계 관리

가. 트럼프대통령은 대중국 경쟁하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타협으로 미중 관계 안정화와, 러-우크라이나전쟁 종식 추진을 통해 미러관계 복원을 추구함에

따라,우리의 주변국 관리가 용이한 여건 활용

나. 25년 한미정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통상관계 안정화,동맹 역량 현대화, 조선 및 핵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새로운 분야 협력확대

다. 한중관계의 다양한 소통 채널로 안정적 협력관계유지

라 우크라이나전 종식 시 한러관계의 복원 도모를 통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재설정

마. 한일간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과거사 청산의 투트랙 접근

2) 대북 억지력 등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유연한 대북전략 추진

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개선과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안보역량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의 개선 및 완비, 핵잠수함건립추진, 한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

나.2026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경주 필요

3) 경제안보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와 다자외교 강화

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원전 등 전략산업 주도의 대미수출전략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특정국 의존도 탈피 전략추진 수출시장 다변화확대.

나. 인도, ASEAN,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을 확대함으로써 미중간 경제양극화의 영향 완화

- 한중일3국협력, 아세안+3, G20, 유럽연합 등 다자 플랫폼 활용, 다변화외교강화

4) 국내 역량 결집과 정치적 공감대 확대 노력

가. 대외 불확실성 시대 하에 일관된 안보 전략과 대외 경제 정책의 지속성 있는 추진이 가능토록 국민적 공감대 확대 노력필요

나. 국방비 증가로 인한 경제산업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구조구축과 내수 기반 확

충 등을 위한 정치적 합의 중요

- 방산 수출 확대로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국방력 확충을 위해 재투자하여, AI·드론·사이버 전력 등 미래전쟁 대비와 산업 역량이 강화되는 선순환 육성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최윤희 (前 합참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1. 한반도 해양 안보 환경 전망 및 대책

가. 전망: 미·중 간 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

ㅇ 일차적으로 서태평양 일원의 해양 통제권 확보를 위해 양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며 역내 긴장 고도화

ㅇ 중국은 전 세계의 해양 통제권 확보를 시도하며 미국을 압박

- 남미, 아프리카 등 12개국에 항만 건설, 조만간 군사기지화 예상

ㅇ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며 중국의 진출을 막으려 하나 역부족

- 조선업 침체로 군함 건조 및 정비 능력 태부족(핵잠정비 2~6년 소요)
- 중국은 미국 대비 230배 조선 능력으로 군함, 상선대(70배) 미국 추월
- 다급해진 대릴 커들(Daryl Cuedle) 미 해군총장 11. 15일 한국 방문

ㅇ 미국의 다자간 대응체계 구축에 북·중·러 vs 한·미·일 대립 구도 노골화, 양 진영의 군비 경쟁 촉발, 북한의 원잠 개발 촉진

ㅇ 북한 원잠은 전 세계 바다에서 해상교통로 교란 등 다양한 도발 가능, 미국 본토 실효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현실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

ㅇ 북한과 일본이 원잠을 개발하면 주변국은 모두 원잠을 보유하게 되어 한반도는 조만간 원잠으로 둘러싸일 전망

나. 대책: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 적극 참여

ㅇ 역량 확보 차원에서 북한보다 조기 원잠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 핵연료 확보 및 재처리를 위한 협상 조기 타결, 국내 건조 관철
- 전장 환경 고려 북한 원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

ㅇ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에 적극 대응, 중단된 서해 한미 연합훈련 재개

ㅇ 해군의 원해 임무 수행을 위한 정책, 전략 개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이상으로 미국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당하게 협상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이재명 정부 對 북핵 '균형(balancing)' 이슈의 이론적 측면들—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1.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의 기회와 비용

- 올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원잠 건조, 전작권 전환 가속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한국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의 조치들로 해석할 수 있음.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능력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 중 동맹 등 외부의 도움을 극대화하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과 대비되는 것. 국내에서는 이를 '자강'이라고 부름.
- 문제는 내적 균형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 한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 구매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위해 10년간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투자 대비 효과(ROI)의 문제도 뒤따름. 원잠이 실제 북핵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과의 조정 문제

- 원잠 건조와 핵 재처리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 등에는 능력의 문제가 따르며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비대칭 동맹인 미국과의 협의가 장시간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밀도 높은 준비와 내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내적 균형을 지속해서 추구하는 과정에 '외적 균형'과의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도 고려 대상임. 한국 일부에서 주장되는 자체 핵공격 능력 보유가 비확산 체제를 고수하려는 동맹국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부르는 상황 등을 상정할 수 있음.

3. 동맹이론 상의 '연루의 위협' 우려 제기

- 동맹 딜레마는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두려움 사이에서 발생.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란 동맹을 체결한 국가가 동맹파트너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 연루란 동맹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동맹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동맹국이 원하는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
- 한미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면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라고 명시. 이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북한 이외의 지역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임.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윤강현 (前 주이란 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한 올 한 해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상황 변화를 경험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구축해 온 국제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기존 시스템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전 당시 며칠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러시아가 장담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다양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유착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다극체제의 등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및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기에 해결한 뒤,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대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의 융합 현상은 더욱 심화하였다. 지금은 경제안보라는 화두가 일상화되었지만 돌이켜 보면 동 주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의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동맹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목격하면서, 어떤 동맹과 우방국도 특정 국가의 생존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강만이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된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고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할 경우,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고 미국과의 안보 패키지 논의가 적절히 정리되면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뜻밖의 전기도 마련되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정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중러 지도자와 김정은이 함께 걷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별한 위기의식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국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근세사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중요도를 인정받으면서 활동했던 시기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지포럼이 이러한 여정에서 중요한 화두와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중동정세를 중심으로—

마영삼(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1. 2025. 12 현재 정세

○ **가자 상황: 불안한 휴전 지속**

・2025.10 휴전, 이집트 평화회담 후에도 간헐적으로 전투 지속, 사상자 계속 발생
  ⇨Yellow Line 경계로 서쪽은 하마스가, 동쪽은 이스라엘이 실질적 관할

・2단계 휴전협상 난항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 하마스 일축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 이스라엘 입장: 하마스 무장해제 전 철군 불가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미국 등 후속 휴전 협의중이나 획기적 모멘텀 부재

○ **레바논 내 상황: 2024 휴전 후에도 전투 지속**

・Litani 강 이남 5개 초소에 이스라엘 군 주둔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베카 계곡 등에서 이스라엘 공군 폭격 계속
    지난 주 헤즈볼라 2인자 Tabatabai 등 표적 제거
  ⇨이스라엘 및 레바논 양측에서 휴전협정 위반 주장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헤즈볼라는 이를 거부
  ⇨여전히 이란으로부터 무기공급을 받아 재무장 한다는 의혹

○ **전후 가자 통치 및 복구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의 20개조 평화안 + 샤름엘쉐이크 평화정상회담
- 11.17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à 전후 평화 추진을 위한 요건을 갖춤
  ⇨국제안정화군(ISF) 창설: 가자 비무장화, 테러단체 무장해제 등 임무
  ⇨과도관리기구(Board of Peace) 설립: 의장 -- 트럼프 대통령
  ⇨인도주의 지원 확대
  ⇨PA 개혁 후 통치 복귀 -à "a credible pathway to… statehood"
- 2단계 휴전과 연계: 실행에 어려움 예상
- 하마스 무장해제 vs.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PA 국가 창설

○ **사우디 MBS 왕세자의 미국 방문 결과**

- 사우디의 대미 투자규모를 1조 달러 규모로 확대
- 반대 급부로, 사우디 측의 희망사항 거의 다 충족
  ⇨F-35 구입, 방위협력, 민간원자력협력, AI
- 미국 요청사항인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문제에는 진전 없음
  ⇨사우디, Pal 국가창설 문제와 연계 "수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2. 2026 정세 전망

○ **중동 Peace Plan 이행에 난항 예상 -à 현상유지 가능성**

-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아랍국/미국의 입장: Status Quo 수용 가능성
  ⇨이스라엘: 필요시 언제라도 공격 가능, 연정 내 강경우익의 입장도 고려
  ⇨하마스,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질질 끌 수 있음
  ⇨아랍국: ISF 참가, 가자 재건 참여를 미룰 수 있는 상황
  ⇨미국: 일단 휴전, Peace Plan,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성과 과시
- 트럼프의 중동평화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 많은 걸림돌 예상
  ⇨Abraham Accord 확대의 핵심은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그러나 사우디가 Pal 국가 창설 문제로 인해 유보적 입장

→ 상황 변경 시까지 긴 시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향후 진전여부에 관건

○ **이란 및 '저항의 축' 재기 모색**

·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재개 조짐

⇨이란은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을 받으면서 핵무기의 절대적 유용성 확신 예상

그러나 국내 경제 및 정치적 요소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

⇨열악한 인프라에도 불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

· '저항의 축' 재구축 노력 계속

⇨이란 →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에 대한 무기공급 등 지원 계속 가능성

· 이스라엘과 미국의 감시망과 대응 태세 지속

○ **비관적 정세 예상**

· 불안한 휴전 상태 지속 전망 -à 휴전 붕괴 가능성도 내재

· 진정한 평화는 아주 먼 상황 – 당분간 Two-State Solution안은 수면 아래로

3. 한국의 대 중동 정책 방향

○ **중동 안보와 평화문제에 기여 폭 넓혀야**

· 여태까지는 깊은 개입을 회피 – 최소한의 관심 표명 정도로만 대응

· 그러나 G-7 가입 거론 등 국제사회에서 업그레이드 된 한국의 위상

⇨높아진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책임 증가

→ 가자, 시리아 등에서의 전후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 ODA 확대 해야

⇨전후 가자의 통치 관련, ISF, Board of Peace 구성에 대한 아국 입장 사전 검토

○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과거 에너지, 건설 중심 협력 -à 전방위 분야로 확대 심화해야

⇨AI, 방산, 원자력, 의료보건, K-컬쳐 등 분야 유망

- 한-이스라엘-아랍 간 삼각협력 구상에 창조적 아이디어 필요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김귀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1. 2025년 글로벌 정세 평가

○ **미국 중심의 동맹 과거보다 약화**

– 미국이 관세,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이익 중심(트럼프 거래형 외교) 정책으로 동맹국과 과거에 비해 불편한 관계 초래

○ **미·중 전략·패권 경쟁 격화 지속**

– 안보, 경제, 기술 경쟁,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 규제 강화 및 수출 제한 조치 등 다방면 경쟁 지속 → 지역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초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영향

– 유럽 국가 자국 국방력 키우면서 군사·경제 협력 강화, 에너지 정책 변화(러시아 의존도 낮추려고 신생 에너지 투자)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부상**

– 미중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독자적 목소리 키우는 추세 → 중국, 러시아, 브릭스 등 신흥국 중심의 연대 강화

○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부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분쟁, 대만 문제 지속,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정책과 핵전력 강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 불안정

– 국제 금융, 통상, 사이버·우주·AI 등 신흥안보 이슈 부각,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지속

○ **꽉 막힌 남북관계**

– 현 정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 단체 전단 살포 제재, 대북 라디오·TV 송출 사업 종료 등 대북 화해 조치에도 북한 태도 불변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7.28)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2. 2026년 글로벌 정세 전망

○ **미·중 정상 상호방문 '빅 이벤트' 주목**

– 트럼프 4월 방중과 더불어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4월 이후 국빈 자격 방미 초청

– 트럼프 방중 시 미중 무역합의 최종 타결 여부 및 무력 충돌 치닫기 전 안전장치(가드레일) 마련 여부 주목

→ 무역·안보 일부 영역에서 빅딜 가능성 있지만, 대만 문제 등 첨예한 현안 둘러싼 이견 노출 가능성도 있음 → 한국은 트럼프 방중 대비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 일환으로 고위급 교류에 속도 낼 것으로 전망

○ **미·중 전략·패권 경쟁 지속**

– 트럼프 방중으로 협력관계 구축하더라도, 경제·군사적 패권 추구에 따른 충돌 지점 생길 수 있어 양국의 근본적·구조적 갈등 구도는 불가피할 전망

○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 미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 지속. 중국만 겨냥하지 않고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시행

○ **사이버, 우주, AI 등 신흥안보 국제적 이슈 지속 부각**

3. 2026 한반도 안보 전망

○ **북-미 정상회담 여부 주목**

- 트럼프 4월 방중, 11월 상·하원 선거(중간선거) 앞둔 상황 등 김정은과 만남 추진 여건은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

→ 북한, 1~2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미 입장 표명 수위 관심

→ 북·중·러 확고한 연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으로 3자 연대를 이완시킬 가능성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3월 한미연합훈련 등 고려하면 상반기 내 남북관계 극적 돌파구 난망**

→ 상반기 내 북미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상황도 유동적 예상

○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서 억지와 대화 병행 등 유연성 강화**

-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 및 대북 군사 회담 제안 등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더욱 공세화할 것으로 예상

○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에 따른 갈등 우려**

- 국방비 증액(GDP 대비 3.5%)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전작권 전환 등 한반도 방위에 한국 독자 역할 증대,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한국 국방력 강화

→ 원잠 건조 장소, 핵연료 제공 및 재처리 문제 등 세부 조율 과정서 이견 노출 우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핵비확산법(NNPA) 등에 따른 수출 심사, 상·하원 외교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초당적 의회 지지 획득 노력 요구

○ **주한미군 역할 변화 실제화되나?**

– 미국은 한국 국방력 강화 요구하면서 대북억제 임무에 집중토록 역할 요구 예상.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위협 억제로 역할 확대할 가능성

→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내 분업' '한미동맹 이완' 등으로 평가, 이에 대한 중국 반발도 우려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글로벌 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1. 글로벌 정세 평가

1)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동시 증가

① 트럼프 2기하 다자주의의 약화와 자유 국제질서의 퇴조
- 일방주의와 국제 규범 경시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저하
- 동맹 관계의 혼조 추세로 관리비용 증가

② 글로벌 동/서간 대립의 재연으로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

가) 미흡한 위기 관리로 의도하지 않은 사건/사고가 오판과 오해로 증폭되어 강대국간 충돌로 비화할 위험 증대

나) 강대국간 상호 불신의 증대로 재래 및 전략 무기 군비 경쟁의 재점화
- 특히 미/러간 남은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New START의 내년 2월 만료로 핵군비 경쟁의 가속화 우려

2) 글로벌 지정학 단층대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 분쟁의 확산 우려

① 동유럽, 코카서스, 중동, 서남아, 남/동 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글로벌 불안정의 호(global arc of instability)' 대두

②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로부터의 후퇴 추세로 생기는 힘의 공백이 주된 불안정 요인

③ 단층대에 위치한 행위자들의 무력 사용을 포함한 현상 변경 욕구를 부추길 우려
④ 세계의 2강인 미국과 중국은 위험 요인 관리 보다 양자간 패권 경쟁에 우선 순위
글로벌 질서가 G-2가 아닌 G-0 양상으로 갈 우려

2. 한반도 안보 전망

1)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유동성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요인

① 특히 한반도 안보의 초석인 한/미 동맹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한/미관계 관리가 최우선 과제
②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양자관계 및 한/미/일 삼자관계의 중요성 증대
③ 북/러간 군사적 밀착과 북핵문제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양자 협의도 활성화 필요

2)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전망은 불투명

① 비핵화 아젠다의 처리 문제가 최대 난제
② 비핵화가 배제될 경우, 한국내 핵무기 보유 여론 재점화와 동북아의 핵 도미노 우려

3)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만문제와의 연동성에 대한 심층적인 내부 검토와 대응 방안 수립 필요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국방안보연구소장)

1. 선거(Election)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기나?
트럼프 정부의 동력 유지할까?

2. 판결(Judgement)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1·2심 법원은 "일방적 관세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
2026년 초 미국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 중반 판결

3. 전쟁(Wa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유럽(EU·나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과 이란은 또 싸울 것인가?

4. 정상회담(Summi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4일 트루스소셜에 “내년 4월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후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중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답방"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난달 25일 CNBC에서 "최대 4차례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미·중 갈등 높아질까? 낮아질까?

5. 대결(Confrontation)

신냉전적 국제 질서
한·미·일 vs 북·중·러

6. 갈등(Conflict)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더 심해질까?

7. 물가(Price)

관세와 공급망 교란이 가져온 고물가는 잡힐까?

8. 대화(Talks)

남북대화, 북·미 대화 시작할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열릴까?

9. 계획(Plan)

국방 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2021~2025)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무기, 고체 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 정찰 위성,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개발
김정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

유했으며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도 적지 않게 이룩했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내놓을까?

10. 전환(Transfer)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일미군 강화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多重戰爭의 시대, 한반도 안보의 ‘뒤집힌 지도’－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1. 각자도생의 국제정세

2025년 하반기 국제정세는 유례없는 격동과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지구촌을 지탱했던 기존의 국제질서 작동 원리가 상당 부분 형해화됐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은 기존 국제질서를 흔들면서 패권주의(hegemonism)를 추구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글로벌 질서를 움직이던 최소한의 이상과 원칙 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지구 전체의 관심사였던 기후변화 대응, 난민 처리, 약소국 보호 및 자유무역 질서 등은 스트롱맨들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안보 상황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1920년대 레닌 정부에서 외무상을 역임했던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는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했다. 지구상에서 강력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전쟁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서 전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활용된다. 전쟁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W. Churchill)은 “전쟁은 군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큰일이다.”라고 했다.

2020년대 들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빈발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외교를 통해 전쟁을 사전에 막는 중재와 조정 노력이 강대국들의 국가 이기주의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평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19세기 대포를 앞세운 제국주의 국가들의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가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

2025년은 2차 대전 종전 이후로 지구상에서 전쟁 뉴스의 빈도가 매우 높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발발 48개월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휴전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거부로 휴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과 인도에 에너지를 팔아 전비를 조달하고 있는 푸틴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2. 불안한 국제정세: 미북의 빅딜

국제정치가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에 들어서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중·러 최고지도자들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국제정치 주요 플레이어들의 역학 구조가 변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의 경제력은 제조업의 쇠퇴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됐다. 미국의 국제경제 비중은 1970년 기준으로 50% 선이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 25% 이하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1%에서 15%까지 상승했다.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은 비용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천문학적인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세계 경찰의 품위를 팽개치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국제사회의 북핵 대세론과 함께 미북 직접 접촉은 패싱에 따른 한국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을 1단계 비핵화로 포장하면서 평양과 핵 군축협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던 부분 비핵화만으로도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포장할 것이다. 영변 핵의 비핵화만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콘도를 건설해 주는 등의 보상안이 트럼프의 유인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려는 노력은 공허해지고 있다. 김정은은 2025년

추석 연휴기간 군사장비전시회에서 한미 핵 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영토가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본격적인 위협을 가했다. 거래적 동맹(transactional alliance)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확장억제[1]를 충분히 제공할 수는 없다.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핵 잠재력 보유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 사례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기술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북핵의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핵 잠재력 구축을 위한 가시밭길의 긴 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3. 브런슨의 ‘뒤집힌 지도(The East-Up Map)’

세상에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없으니, 트럼프의 국제정치 대전환 기조에서 혈맹이라던 한미동맹 역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72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버팀목이었던 한미동맹은 변화의 바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을 갈취의 주체로 평가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반도에 몰아닥친 두 개의 폭풍은 보호무역주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역할 변화이다. 관세전쟁은 고율의 상호관세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 및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치킨게임이다.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장문의 기고문에서 동아시아를 거꾸로 바라보는 지도를 게재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국·일본·필리핀의 삼각 협력을 강조했다. 브런슨의 '뒤집힌 지도'는 한국이 스스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한국이 과거에는 전방에 있는 외곽거점처럼 인식됐으나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축(pivot)”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의 핵심기반 요소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의‘뒤집힌 지도’는 한국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

1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삼국이 핵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려는 핵전략의 하나로 영어로는 extended deterrence.

과 위상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신냉전이 강화되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여 유사시에 해외의 전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2]

'뒤집힌 지도'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미중 갈등 시대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미국이 에둘러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동북아 국제정세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발언으로 중일 간 극한 갈등 등 새로운 외교 안보 이슈가 부상하며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기존 국제질서와는 다른 동북아 안보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과제가 닥쳐오고 있다. 요컨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의 미래가 흔들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 [Commander's article] The East-Up Map: Revealing Hidden Strategic Advantages in the Indo-Pacific. https://www.usfk.mil/ Nov. 16, 2025.

【토론문】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김용휘 (Yung Gallery 회장)

한반도 안정은 중동 공급망 안정과 연결된다
- 중동은 한국의 에너지·건설·투자 파트너이며 한국의 첨단 기술·제조·인프라 필수 파트너
- 한반도 불안정은 중동의 공급망·투자 리스크로 직결
- 한반도 외교·안보 안정은 한국-중동 경제 모두의 번영 기반으로 구축

1. 한국 기술·제조·인프라가 중동 국가들의 경제전환(Vision 2030/2050)에 필수

융갤러리는 한국 기업의 실제 기술력·공장 수출 경험을 기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 스마트 제조
- 방산·AI
- 헬스케어·바이오
- 모빌리티·EV·
- 건설·스마트시티

중동의 미래 도시·산업은 한국 기술 위에 세워 질수 있습니다.

2. 북핵 불안정은 한국 기술·산업의 글로벌 확장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중동에도 손해

- 북핵 긴장은 K-기술·K-산업의 안정성에 의문을 만들 수 있음

- 중동 국가들은 장기계약·장기투자를 선호
- 한국 정세 불안 → "산업 파트너 리스크"로 전이 가능

한반도 평화는 한국 기술의 글로벌 신뢰도 강화 = 중동 국가들 투자 안정 강화

3. 한국-중동 협력이 '평화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융갤러리는 경제 협력 현장에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큼

- 경제 교역·산업 협력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며,
-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기술·인프라 협력 → 일자리·경제 안정 → 안보 안정성 강화

경제가 평화를 만든다(Economy-first Peace Model)

4. 한국 기업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어필

융갤러리는 단순 '수출 기업'이 아니라,
한-중동 전략적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중개자/촉진자 역할을 함

5. 의제(Agenda)

가. 중동–한국 공급망의 전략적 결합

- 북핵 및 동북아 안보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중동 에너지 + 한국 첨단 제조 = 상호 의존 구조 강화 전략

나. Vision 2030·네옴·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

- 한국 기술이 가장 필요로 되는 분야
- 한국 투자·기업 진출 성공 사례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다. 한반도 위기 시 중동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원유 해상 운송
- EV·배터리 공급망
- 반도체 수요
- 한국 건설사의 대형 프로젝트 차질

라.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Economic Peacebuilding)의 가능성

- 북한·러시아 교역 변화
- 한국-중동-미국 3각 협력 모델
- 원자력·에너지·방산 협력 확장

마.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신뢰 구축 전략

- 기술 수출 vs 공장 패키지 수출
- 현지화 전략(인력·교육·공동 연구소)
- ESG·투명성·장기 파트너십

바. 한국-중동 스타트업 및 벤처 생태계 연결

- AI·로봇·헬스테크
- 양 지역 인재 교류
- 공동 펀드 조성

사. 글벌 안보·경제 블록 시대에 한국의 생존 전략

- 중국/미국/중동 균형
- Price cap, 반도체 규제 등 대응
- 한국-중동 공동 기술 표준화

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의 한반도 중립·전략 모색

- 군사·외교 리스크 완화

- 경제 파트너 다변화
- 중동과의 연대 확장

전략적 포인트

1. 한국-중동 경제 협력은 새로운 평화 안보 모델
2. 공급망 안보는 군사 안보만큼 중요하며, 한국과 중동은 공동 운명체
3. 한국 기술은 중동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장 신뢰 가능한 파트너
4. 한반도 평화는 한국 기술의 글로벌 신뢰도와 투자 안정성을 높임
5. 우리는 기술·제조·인프라를 넘어 '신뢰'를 수출하고 있음
6. 경제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갈등을 감소시키고 평화 기반을 확장
7.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은 한반도의 미래 안정성에 직접 기여

【다자토론】

2025 ~ 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前 주우크라이나 대사
김용휘 융갤러리 회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마영삼 前 주이스라엘 대사, 前 주팔레스타인 대표
김귀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윤강현 前 주이란 대사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 **최윤희 총재** : 저는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는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 해군이 탐지 장비를 개발하고 자기들의 전술을 적용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아닙니다. 저희가 1990년도에 처음 잠수함을 확보해서 미국하고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미 해군의 작전 개념에 의하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진영을 만들어서 항공모함이 원하는 작전을 하면서 구축함을 비롯해서 잠수함까지 한 10여 척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면서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이것을 막으려고 작전합니다. 그런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도 작전이 안 뚫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재래식 잠수함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활동 범위도 한반도 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순간 그들이 펼칠 수 있는 작전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볼 때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을 겨냥한 작전을 할 겁니다. 그것은 미국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핵탄두 잠수함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방사포나 중거리 미사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문제이고 그럼 우리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순간 어떤 위협이 있느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계 전 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상교통로에서 북한이 엄청난 교란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뜻을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 **유성옥 이사장** : 연말 바쁜 시간에 백승주 회장님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여러분 전문가를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윤희 의장님 핵추진 잠수함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오래 다뤄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 분야를 좁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 북한이 남북 간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몸이 닳게 되면 결국 북한에 끌려가는 갑을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쉬워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강력한 대북 국제 제재 이후에 북한이 2018년, 19년도 미북,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그만큼 제재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더 북한에 인센티브뿐 아니라 디스 인센티브, 아프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전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이 2026년을 소위 핵보유국 원년화를 하지 않겠느냐, 핵보유국으로 공인받는 원년을 2026년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남 측면에서 남북 대화는 계속적으로 무시할 것이고, 특히 이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대남 해킹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난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정도로 해킹을 했습니다. 알려진 게 그 정도 같으면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파괴 공작을 통해서 우리 사회 혼란을 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준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간산업을 작동 불능화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위험한 평화지만, 사실상 저는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를 보게 되면 24시간 치열한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미북 대화입니다. 북한은 계속 그 문턱을 높일 것입니다. 완전한 핵 국가 인정을 받기 전에는 대화에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단, 트럼프는 평화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참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김정은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하는데 아직은 트럼프가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압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공개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압박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잘 짚어서 잘 대응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박노벽 대사** : 우리 백승주 회장님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공통된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우선 1년을 나지포럼 참석하면서 느낀 바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잡한 강대국 주도의 지정학적 그런 이익이 충돌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서도 정말 주도적이고, 동맹 관리도 하면서 저항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외교적으로도 주변국 관리를 잘하여 한 해를 그나마 아주 집중적인 노력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28개 조항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성사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푸틴, 러시아의 야심이라고 그럴까요? 그 본심이 다시 재확인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에서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트럼프식이든 어떤 좋은 중재 방안이 나왔다면, 러-북 관계에 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유 또는 우방 국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우리

한테 뼈아픈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자기 앞마당인데도 적극적으로 100% 지원을 못하는 상황 또 강대국인 미국도 강대국 간의 관계를 위해서 중견국이나 약소국의 이익을 굉장히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겪어왔던 여러 가지 똑같은 경험입니다만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새겨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성사됐더라면 4월에 있을 미중 회담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미국이 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잘 진행되어서 평화의 지도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꿈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앞으로 최윤희 의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우리의 자각력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강대국 간의 갈등 구조가 너무 고조되기보다는 관리하는 노력 속에서 중견국의 이익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 및 안보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대북 억제력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 핵 잠수함을 비롯해서 재래식 억지력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오히려 대북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한미 간에 3,500억 불에 관한 것, 어마어마한 우리 국력의 투자액을 이제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우리가 조선 그리고 원자력, 반도체 등 우리의 전략 산업과 연결을 지어서 국방과 그리고 산업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잘 짜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여야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단합된 그리고 일치된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점이, 또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 분열되지 않고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 좋은 인풋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의 의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휘 회장** :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다녀왔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하고 국내 기업인 70명, 한 30개 기업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중동측 국부 펀드사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국부 펀드 분들이 한국에 오셨으나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에 맞추지 못해서 무기들이나 레이더나 드론 같은 것들이 수출이 못 되

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리포트(Test report)가 저희가 직접 보는 것과 그들이 테스트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제품들과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이기기가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고,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저희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출하고, 합자 법인 세우고 펀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삼성,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만 해도 올해 12월이면 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 공장 기지를 완료시키고 63%의 성장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쪽에서 로비스트 일들을 했을 때는 돈이 없는 국가들이랑 저희가 일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저희의 좋은 기술들을 좋은 금액대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교류가 일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덴(Maaden)이나 아랍에미리트의 가스코(Gasco) 같은 국영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교류해서 펀드를 국내로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자금만 가지고서는 이게 투자가 될 수 없기에 한국 기술과 기업이 넘어가서, 저희가 저가 생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원자재도 저가로 공급을 받아서 한국 브랜드를 얹어서 제품을 사우디제이션에 맞게끔, 주변 중동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외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석호 이사** : 예, 오늘 송년회에서 여러 선배님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나지포럼에 여러 번 나오면서 상세한 팩트보다는 그 팩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에, 저는 그 특색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는데 단순히 팩트의 묶음은 아니고 트럼프가 1기 때 왜 김정은, 북한 다루기에 실패했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트럼프가 지키지 않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원칙과 이론과 철학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무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작년과 올해도 여기 참여하면서 이제 계속 이론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오늘 오기 위해서 이제 10월에 벌어진 일들을 이론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가님이 자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인터널 밸런싱(Internal Balancing)이죠, 교수님 옆에 계셔서 제가 두렵습니다만 인터널 밸런싱이라는 이론적인 개념으로 보이는데 아까 최윤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론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일단 핵잠수함이니 전작권 환수니 이런 것들인데 또 이것들이 돈이 굉장히 듭니다. 돈이 굉장히 들고 아까 의장님은 그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분

들은 우리가 대양 해군을 할 것도 아닌데 그게 필요하냐 이런 반론을 펴기도 하고 또 그 기술이 우리한테 완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잘 못해서 익스터널 밸런싱(External Balancing)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미군이 글로벌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펼 때,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식으로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연루의 위험 혹 동맹 간의 연루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개념의 틀로 최근 상황을 보니까 최윤희 의장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 **신범식 교수** : 저는 이제 2025년, 26년 이렇게 봤을 때 국제 정세에 대해서들 다들 말씀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된 패권 경쟁 그것은 일단 변치 않은 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변화가 된 부분은 동맹체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갈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분쟁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8개 조항, 다시 또 10개 조항 더 줄여서 7개까지 그런 방향이 나오는데 그렇게 줄여갔어도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중립화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유럽, 러시아에서도 어정쩡한 사태 마무리는 영원한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급해도 그 근본적인 간극을 메우는 데는 쉽지 않겠다, 그렇기에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다고 봅니다. 임시라도 좋으니 분쟁이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교착상태와 소모전이 당분간은 계속 가겠다고 내년 상반기까지, 당분간은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봤을 때 작년에는 러시아의 해당 능력이 좋았으나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교착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희망은 어정쩡한 상태의 휴전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서방에 의한 러시아 제재도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고 서로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작업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2~3개월씩은 걸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당분간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기다리는 자세보다는 좀 창조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내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 **백승주 회장** : 종신 대통령 푸틴하고 4년짜리 임기 트럼프하고 보았을 때, 조급함이 트럼프한테 있는 것이네요.

▣ **마영삼 대사** : 저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양쪽에 다 대사를 했습니다. 지금 가자사태의 경우 조건이 첫째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 조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다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만,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핵심은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오히려 무기를 더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가자사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지난주에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은 뭐냐 하면은 국제 안정화 군을 창설하는 것이고 또 과도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2단계 휴전 협상이 완료되기를 이제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동 평화로 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이제 확대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를 창설하는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의 플랜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중동 평화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깊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심 포인트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곳으로 진입하겠다는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

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자지구나 시리아에서의 재건 복구 사업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에 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DA로도 확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리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국제 안정화군이라든가 또는 과도 체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동 정치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실질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고 이걸 전방위적인 분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상당한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랍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참여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란측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디펜스 시스템이 5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디펜스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밤에 북한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급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귀근 기자** : 보통 언론사에서 이때쯤 되면 이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기에 그런 특집 기사들을 준비하고 곧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업에 있었으면 내년 전망은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 계엄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혼동스럽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거래 요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갈등을 그런 겪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또한 국방, 군사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 최윤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추진 잠수함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연안 방어에 좀 더 집중해서 무인화에 좀 더 소형화, 무인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핵잠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에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형 원자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서 상세하게 무언가 미국과 갈등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이 부분도 지금 국방부 장관의 멘트를 보면 현 정부 내에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또 진보, 보수의 어떤 그런 상반된 논리로 상당히 갈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이 또 어떻게 변할지, 과연 한반도 방어는 기본이지만 좀 더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어떤 임무와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부분도 내년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4월 트럼프 방중으로 인해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을 좀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3월에 또 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취소한다거나 조정한다 해서 북한이 선뜻 이렇게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로를 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좀 힘을 미국 쪽에 실어주면 어떨까, 외교 방향이 그런 식으로 내년에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철재 기자** : 저는 10가지 키워드를 했었는데, 이제 선거, 판결, 전쟁, 정상회담, 대결, 갈등, 물가, 대화, 계획, 전환,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년 정세를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주요 성장 키워드가 미국 국내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정세와 질서를 흔들고 있기에 상당히 전 세계가 다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중간선거를 지금 첫 번째 키워드로 꺼냈는데 그게 상당수의 이제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의 강압에 의해서 관세 협정이 맺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길 중간 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그대로 하겠지만 그전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면서 관세 협정 이행을 미룰 거라는 그 전망에 기대서, 그만큼 미국의 중간선거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 같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들 말씀하신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이 4차례 예정이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고 미중 대립이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또 더 심해질 것인가 이렇게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결, 갈등 그리고 또 특이하게 저는 물가를 한번 뽑았는데 고물가가 되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물

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갔고 최근에 보면 그다음 2022년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특히 미국은 공급망 교란과 함께 관세 인상에서 물가 현상이 물가 보호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뽑았던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히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물가가 높아지면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물가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대화는 많은 분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본 것은 이제 북한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의 개발 계획을 내세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잠수함 건조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해서는 좀 더 협상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나 그다음에 주일 미군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우리 안보 위기나 그다음에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좀 많이 약화될까 우려합니다.

▣ **백승주 회장** : 다음 천명국 위원분이 원잠의 기술적 측면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천명국 전문위원** :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핵추진 잠수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핵무기 개발하는 것에 버금가는 비견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후속 조치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상세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에 앞으로 후속 협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대내외적인 난제를 구분해서 몇 가지들만 간략하게 언급하면 대내적으로 이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이하 원잠)의 역할과 건조 규모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얼마나 필요할지 국가 전략 그리고 그 밑에 안보 전략, 국방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부터 정해져야만 어느 정도 규모의 원자력 잠수함을 몇 척 정도 단계별로 건조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이런 구상이 되는데 그것 없이 일단 먼저 원자력 잠수함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안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대내적인 문제입니다. 원잠 기지 선정 확보 운영 문제인데 원자력 핵연료를 탑재한 원자로를 갖고 있는 이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에 우리가 정박시키고 또 귀항시키고 또 숨기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큰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잠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도 지금 발전소 부지에 거의 포화 상태가 다 되어 가고 있고 빨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조차 가동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할 텐데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대외적인 난제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핵연료를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인지, 90% 이상의 고농축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농축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혹은 제3국으로부터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농축 재처리 승인을 받아서 그걸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90% 핵연료를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저농축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활용하는, 우리 고유의 원자로 개념과 또 핵연료 설계 제조 방식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조 장소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우리 국내 조선소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국내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미국에서 아마 도입해야 할 것이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두 척씩 병행 건조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병행 건조하든, 먼저 미국에서 몇 척 건조해서 가져오고 나중에 우리가 국내 건조로 전환하든, 우리 국내 건조 역량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또 구축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자로 해결 문제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개정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자체 농축이라든가 재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군사적 활용은 한미 원자력 협정상 혹은 미국의 원자력법상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춰 놓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농축 역량을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변화가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원잠 운용, 정비,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은 미국의 어떤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 역할 조정 문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앞에서도 여러분들 언급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도, 우리가 원전 문제를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주변국과의 긴장 관리 문제, 안보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대외적인 난제들을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디테일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정말 대승적인 관점에서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에 따라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범정부 TF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이신 전문가들의 조언, 자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규 실장** : 이렇게 여러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북한 군사 포럼을 했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국방연구원 계실 때 북한 군사 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포럼이었는데 이제는 핵안보 연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포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150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언론사 20군데에서 이렇게 인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2023년에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려라는 지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그 정도 숫자를 판단한 것이고, 이 숫자의 의미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억제나 대응 능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비핵화를 빠르게 추진해야지 그러한 능력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윤희 합참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의 정책적 방향성이 그러하니까 언젠가는 보유할 것이고 이것이 가지는 군사적인 위협보다는 저는 전략적인 위협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핵추진 잠수함은 이격 능력에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격 능력의 문제는 확장

억제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막고도 미국의 어떠한 특정 도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드골(de Gaulle) 의심처럼 미국이 뉴욕이나 L.A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느냐는 이제 국민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달에 북한이 아마 9차 당대회를 할 텐데 이 9차 당대회에서는 저희가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북한판 핵·재래식 통합(CNI)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이 CNI를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러한데 북한은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미국은 재래식 능력이 높은 반면에 북한은 재래식이 열세한 상황에서 핵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이걸 어떻게 전쟁에서 사용할지에 대한 양상을 좀 예의주시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2026년의 전망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 성과가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꽤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제 CNI 협력까지 계속 추진을 하면서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특히 우리의 전략사를 창설하면서 우리의 개요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그런 확장 억제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장 억제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내년에 특히 북미 대화가 추진이 될 경우에 대화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조금 줄인다든가 어떠한 이제 안보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좀 확장 억제 협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대화가 과연 이제 성사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큰 틀의 이제 비핵화 합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북핵 1, 2차 위기를 보면 똑같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그러한 1차 방정식의 그런 해결 노력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 능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의 상응 조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맞교환이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 더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교환 솔루션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반면에 현재도 북한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그렇게 큰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 부분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그런 확장 억제나 그런 비핵화에 있어서의 고민 지점이 되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간략하게 과제를 말씀드리면 앞서 천박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내법상의 이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상업용 연구용은 있으나 군사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미국 원자력법상에 만약에 군사용으로 핵연료를 수출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확산 노력이라든가 여러 노력들이 함께 첨부가 되어야지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할 것이고, 이 허들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 조치입니다. 이제 금지하지 않은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이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찰 면제 조치를 받을지 안전 조치 면제 조치를 받을지를 좀 고민해야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TF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국민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사용 후 핵연료도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해야되는 부지 선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핵추진 잠수함과 같이 이제 혼동이 돼서 인식이 된다면 마치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처럼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히 분리해서 계속 외교부와 국방부가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남성욱 교수** : 초청해 주신 백승주 회장님, 최윤희 의장님 감사합니다. 11월에 최윤희 의장님이 바다를 공부하라고 그래서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 배를 타고 갔더니 17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왕복 34시간 걸리는데 그 바다를 한참 쳐다보니까 바다가 잠시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흔들리는 그리고 부산항에서 한 1시간까지는 연안 바다라 흔들림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대마도 근처를 지나가니까 이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본 세토나이카로 들어가니까 배가 이제 조금 내해라 역시 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3월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순신 장군 특별전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유물들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이 총집합합니다. 이번에 안 보면 못 보는 그런 아주 칼부터 여러 가지 기록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참 싸우면서 고독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도 부산항에서 제주 강정마을까지 밤새 가면서 강의 토론회를 했는데 그 때도 힘들었지만 이번도 만만치 않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2기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NSS라고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한마디로 이제 나침반입니다.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빠르게 보는데 결국 동맹국들 부담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집단 방위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노스 코리아(North Korea, 북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1기 지침 때는 노스 코리아 단어가 16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니, 이제 조만간 국방부에 또 하부 지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이제 내년도 정세가 다 전망이 되는 겁니다.

▣ **윤강현 대사** :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져다가 저희가 보면서 마음에 뜨는 화두는 '세상에 믿을 놈은 한 놈도 없다.' 라는 화두였습니다. 결국은 답은 이제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우리 자강인데, 자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올해 몇 년 전에서부터 점점 지금 안보와 경제가 융합이 되는 추세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인사가 이제 안보의 전문가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강을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저 반대편에 있는 융합 형상에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조금 더 이 세계적인 융합 추세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앞으로의 미래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 대응 체제로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특히 부각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보와 경제 두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면서 레버리지(leverage)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자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 지난달에는 제가 목발 두 개를 짚었는데 오늘 올 때는 그래도 하나는 떼어냈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서 지금 제 전에 말씀하신 남 교수님하고 우리 윤강현 대사님 말씀에 조금 제가 붙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붉은 말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지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엔을 떠난 지가 7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 분쟁 특히 이제 국제 안보 지형이 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강대국의 관심 밖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겁니다. 유엔이 떠맡아서 평화 유지를 해줬는데 그 후에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도 철수하겠다고 하고 세계 경찰 역할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안보 전략도 이제는 버든 셰어링(Burden Sharing)을 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힘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전쟁이 이제 국제전이 생긴 겁니다. 두 개의 큰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더 나아가서 이란하고도 전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쟁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더 심각한 분쟁들이 생기니까 제가 유엔에 처음 갔을 때 난민이 2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 6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끝이 안 나고 새로운 문제에 더 심각한 게 얹히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힘의 공백이 생긴 것을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보는 행위자들이 이 단층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글로벌 동서가 딱 그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단층대가 형성됐는데 그게 동유럽에서 코커서스, 중동, 서남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층대에 서쪽은 불이 붙어 있고 관건은 동쪽으로 이게 옮겨오느냐인데 동쪽으로 옮겨오면 3차 세계대전입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옮겨오는 불을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인데 그 책임을 해야 될 미국은 안 합니다. 중국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단층들의 동쪽에 있는 이제 남중국해부터 한반도까지 이어지는데, 현상을 변경하고 싶은 행위자들이 있는데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위자들의 결속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신석호 이사님이 자료에 있는데 말씀 안 하신 우리의 문제는 동맹의 두 딜레마 광기의 위험, 어밴던먼트(abandonment)의 위험, 엔트랩먼트(entrapment)의 위험 그런데 우리가 엔트랩먼트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어벤던먼트의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잠도 북한만을 대항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승인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국쪽에서 오는 위협도 대응한다고 하니까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엔트랩먼트가 무서워서 발을 빼면 그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딜레마가 동시에 걸리는데 만약에 북미 대화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저는 세

번째 딜레마도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을, 우리를 빼고 교섭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딜레마가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안에서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커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잠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되어도 거기에 또 다른 딜레마가 걸립니다. 안보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증강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역내에서 군비 경쟁을 쏘아 올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가 그러면 그렇게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복잡한 이게 고차 방정식이 전개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윤강현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 역량, 우리가 자강을 해야죠. 필수적인 그 자강의 기초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거냐 그러면 엔트랩먼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과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할지를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진보, 보수 이게 차별없이 토론해서 하나의 정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이 실종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대해서 100%의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 없는데 우리 동맹 또 우리 주변 국가들이 그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강의 첫 번째는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승주 회장** : 토론이 실종됐는데 우리 나지포럼이 토론을 부활시키고 있는 포럼이 아닐까 생각하며, 내년에 좀 더 나지포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의 전문가가 이렇게 1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토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유엔 헌장을 공부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략한다 니까 유엔 상임이사국은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되는 거 아닌가, 유엔 헌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엔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사무차장님이 참 명답입니다. 유엔이 죽어가고 있다, 명답입니다.

1938년 뮌헨 협정이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이 체코를 침략하자 침략한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체코 침략해서 영토를 점령했으니까 체코 땅을 그러면 히틀러에게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다음 다른 데 침략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고 우리 이제 평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총리가 누굽니까? 체임벌린이 이 평화를 만들었다고 완전히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점령하니까 인정하네 하고서 히틀러가 다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침공하니까 갑자기 히틀러를 그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히틀러에게 선전 포고를 했는데 한 6개월 걸려야 프랑스 국경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었습니다. 유럽의 걱정은 그 당시 상황이 망령처럼 유럽 지도자들에게 머리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지도력,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벌써 프랑스 마크롱은 트럼프가 배신해서 우크라이나 버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큰 문제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동맹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한다는 믿음,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안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핵무장 문제라든지 또 전작권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 과제를 우리 안보 전문가들과 정부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서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유럽이 대혼란에 빠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나하나 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찰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내년에 만날 것인가 만나면 몇 월 만날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의의 제스처를 하는데 북한이 남북 대화할 것이 있냐 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한 분씩 대답을 해주세요. 연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만난다, 안 만난다 혹 몇 월에 만난다해서 내년 연말에 누가 통찰력이 있는가를 우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 **최윤희 원장** : 회장님, 저 생각지도 않게 저를 첫 번째 토론자로 선정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지고 계신 전문 견해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만 저는 그래도 명색이 역대 해군 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이건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갖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어떻

게든지 설득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동해의 환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실제 현장에서 훈련도 해봤고 북한 잠수함에 대해서 정말 찾아서 그것을 해보려고, 침투 막으려고 현장에서 작전도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절하게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 핵무기를 가지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을 아마 1차로 목표 할 겁니다. 그런데 전술적으로 그거 이상으로 핵잠수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많아서 우리를 얼마든지 정말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안함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무한대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 SLBM, 이 잠수함이 미국이 14척, 러시아가 8척, 중국이 6척, 프랑스와 영국이 4척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전략잠수함들이 항구에 있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바다로 나가면, 그 잠수함을 어디서든지 찾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작전 능력을 가질 그런 수단은 핵추진 잠수함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못 잡고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도와주느냐, 못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 **백승주 회장** :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것 같습니까?

▣ **최윤희 원장** : 트럼프와 김정은은 만나지 않을까요.

▣ **유성옥 이사장** : 저는 못 만난다고 봅니다. 핵 보유국 인정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김정은이 만나지 않을텐데, 미국이 핵 보유국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미국의 안보 침탈이 있기에 그건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 **박노벽 대사** : 만날 가능성과 못 만날 가능성은 50대 50,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조건에 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가 우리는 북한만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엮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의 요구나 중국의 입장 그리고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면 시진핑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북 대화를 종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성옥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과연 그런 비핵화라는 안보 지침에, 북한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로서는 그 조건을 맞추면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조건이 맞춰지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6 대 4 정도로 저는 보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외교관분들은 주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요.

▣ **박노벽 대사** : 아니, 조건을 이야기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을 맞춰주면 6이 될 텐데 6이 못 되면은 이제 4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 **김용휘 회장** : 저는 5월, 6월 정도에는 양측이 협상하려고 시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두 분이 만나건 안 만나건 그것은 별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결론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신석호 이사** : 안 만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 **신범식 교수** : 원래 외교관보다 더 애매한 것이 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무식한 학자로서 과감하게 말하면, 저는 미국이 북한에 명분 그다음에 이익, 모든 면에서 줄 것도 없고 또 명분으로 합리화할 근거도 굉장히 약해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겠지만 북한이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런 쪽에 걸겠습니다.

▣ **마영삼 대사** : 저는 만날 가능성이 안 만날 가능성보다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귀근 기자** :는 개인적인 바람이 둘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망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재 기자** : 저는 북미 대화는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 **천명국 전문위원** : 저는 안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 표하겠습니다.

▣ **이상규 실장** : 저는 2에서 3분기 사이에 만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하고 또 노벨평화상 추천 시기가 10월, 11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9차 당대회 1월 내용을 보면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성욱 교수** : 지난번 월간조선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합니다. 김여정이 후계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 일입니다. 만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윤강현 대사** :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니까 굳이 찍으라고 하시면 만나는 쪽에 걸겠습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는데,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만나는 것에 걸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밀당이 있는데 트럼프가 내년에 중국에 한 번은 올 겁니다.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가 중국에 올 때 그러니까 내실을 거두기보다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회장** : 저도 만나는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9대 6 정도로 만나는 쪽에 베팅하시는데 아마 내년도 한반도 정세가 가장 요동치는 부분이 북미 대화가 된다면, 북미 대화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와 같은 과제들이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한 분 한 분 모셔서 말씀 듣기도 힘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나지포럼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포럼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지성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토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KWO 나지포럼
2025~2026 국제정세 평가와 한반도 안보 전망

발 행 인 백승주
발 행 일 2025년 12월 5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174
편집위원장 서진아
편 집 위 원 서원주, 이재헌, 백연주, 이정선, 강지형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